

미 래 國
한 國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2017 · SBS

제15차 미래한국리포트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 방정식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사회

일시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07:00~09:30

장소

서울 신라호텔 2F Dynasty Hall

발표

1. 기회가 실종된 '격차사회' - 신승이 SBS 기자
2. 양극화의 늪...다층적 불균형 -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 '수저사회'...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4. 신사회 위험 극복과 21세기형 복지 -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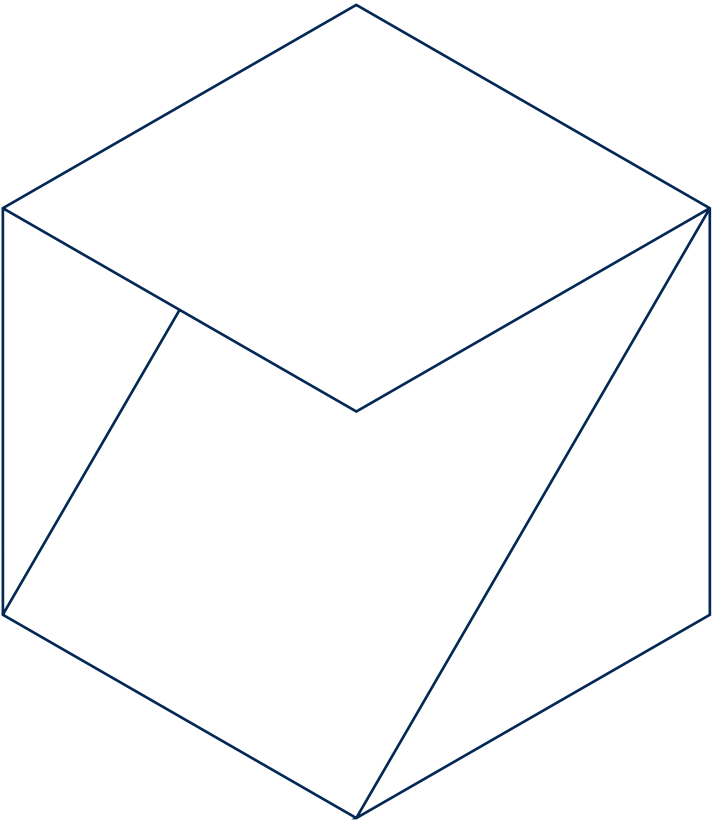
지난 미래한국리포트

- 제 1차(2004)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 제 2차(2005)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 제 3차(2005)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동방학습지국의 비전
- 제 4차(2006)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 제 5차(2007)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 제 6차(2008)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 제 7차(2009) 위기를 넘어서
- 제 8차(2010) 2010 대한민국 ‘소통’
- 제 9차(2011) 경쟁의 딜레마: 공존의 新생태계를 찾아서
- 제10차(2012)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 제11차(2013)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 제12차(2014)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 성장사회
- 제13차(2015)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사회로
- 제14차(2016) 대한민국 新인구론: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CONTENTS

목차

PRESENTATION		
1	기회가 실종된 ‘격차사회’ - 신승이 SBS 기자	06
2	양극화의 늪…다층적 불균형 -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4
3	‘수저사회’…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2
4	신사회 위험 극복과 21세기형 복지 -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8





“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SBS 대표이사 사장 **박정훈**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 방정식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사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속에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와 윤택한 생활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계층 간 갈등의 조짐까지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화의 급물살은 불평등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포용적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격차는 줄여야 하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능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만족스런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15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방정식 -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사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미래한국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PRESENTATION

기회가 실종된 '격차사회' - 신승이 SBS기자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잣더미에 놓였던 우리는,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규모 7위를 자랑하는 경제강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연평균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역동적인 사회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어느새 위험수위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된 정도는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 1% 비중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이 지난 1995년 전체의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불과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극화의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44%, 즉 절반 가까이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인 반면, 4분의 1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채 이상 가진 집 부자도 4만 5천 가구에 이릅니다.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가 전체 주택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로소득인 부동산 가격은 임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 서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깁니다.

부동산을 포함해 전체 자산의 66%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고작 1.6%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불평등이 심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빼 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IMF 위기는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됐는지 보여주는 소득 지니계수 그래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즉 그래프가 위쪽을 향할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던 불평등 정도가 1997년을 기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림 1)

임금소득자만 떼어 놓고 보면 변화가 더 분명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알파벳V자 모양과 비슷한데 1980년 이후 점점 개선되던 임금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반전돼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평등 양상을 보면, 1970년대 이후 양극화가 완화된 유럽 국가들과 1980년대부터 양극화가 다시 심해지는 영국과 미국,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중

요시하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 국가들이었죠. 우리의 불평등 양상은 IMF위기를 기점으로 영·미형 국가 모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습니다.

INTERVIEW

서울 관악구의 한 전통시장. 이순택씨 부부가 일하는 호떡 가게가 있습니다. 출판사 직원이었던 이씨는 1997년 말 회사가 부도나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순택 / 59세

“내 자신의 무력감이 더욱 컸었죠.

그러다보니까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결국은 방에서 일어 나지 못했어요.

한창 때인데, 경제적으로 활동할 한창인 나이에...”

비슷한 처지의 직장인들이 그랬듯 이씨 부부도 작은 식당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 8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영세한 식당은 살아남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안 나왔죠. 월세가. 그러니까 인건비 뿐만 아니라 월세가 안 나왔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에서

(그림 1)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그림 2)

GDP와 임금상승률



출처: 장하성, 2000-2014

(그림 3)

GDP대비 가계소득 비중 변화



출처: OECD

(그림 4)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출처: 고용노동부, 2016.06

하는 곳은 기획적이다 보니까 (가게 인테리어에) 개성이 있죠. 그런데 개인이 하는 곳은 단순함, 깨끗함, 정리정돈..., 이 정도는 남의 시선에 들어 오지를 않죠.”

한 번 불안정해진 삶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 다. 매장 규모와 투자금을 줄여 벽지 가게, 이동식 건어물 가게까지 온갖 일을 해 봤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에 월세 부담까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봄 전통시장 한 칸에 지금의 호떡 가게를 내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게 행운이라면 행운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점점 운칠기삼이 운구기일(運九技一)로 간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100% 운으로 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해 냈지만 긴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제일 걱정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저 뿐만 아니라 노후는 다 걱정될 거예요. 다 불안해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서로들.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 7)

IMF 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는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노후 빈곤이라는 또 다른 뗏에 직면해 있습니다.

IMF 위기 이후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고 살아 남은 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며 성장했는데 가게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천년대 들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규모는 평균 174% 성장했습니다. 임금도 함께 올랐지만 따져 보면 153% 느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제조업 임금의 증가폭은 136%에 머물렀습니다. 경제성장의 속도를 가게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림 2)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까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영업 5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한 달에 100만원을 채 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이렇게 가게의 주 수입원인 임금과 자영업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 국민총생산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계소득 비중이 많이 줄어든 나라입니다. (그림 3)

경제 성장과 가게 형편이 어느 정도나 일치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SBS가 전국의 성인 남녀 1,2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천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이익이 결국 가게로 흐를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이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기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일자리의 양극화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금의 80% 가까이었던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이 이제는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비율도 양극화에 불을 붙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데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에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그림 5)



(그림 6)



(그림 7)



지 더해지면,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림 4)

열악한 일자리는 경력으로 작용하기 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기 어려운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청년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 40%이상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거나 아예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림 5)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는 청년세대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안정된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는데, 나머지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다 보니 너도 나도 비좁은 양질의 일자리를 향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9급 공무원 시험의 모집 정원은 5천 명이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린 사람이 역대 최대인 22만 8천 3백여 명이었습니다. 무려 46.5: 1의 경쟁률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전국 수험생 중에서 이른바 S.K.Y.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비율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림 6)

청년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 일까요? 그들을 만나 봤습니다.

INTERVIEW

서울시 공공일자에서 일하는 29살 최재혁씨. 최씨는 12년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재혁 / 29세

“식당 서빙, 술집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고, 아침에 무료 신문 돌리는 일이라든가...”

남들처럼 취직할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려운 가게 형편 탓에 자격증이나 어학연수 같은 스펙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비정규직이나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 외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8시 출근하면 밤 10시 퇴근하는 게 일상인 분야인데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해도 누구는 스펙이 좋으면 월에 230만~240만 원 초봉 받고 누구는 140만~15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시작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열망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네 평자리 원룸에 살며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로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큼니다.

“갑자기 그냥 ‘어, 이 일 곧 그만둬야 하는데...’ 이런 생각 들고..., 계속 빚만 갚다가 죽을 것 같은 삶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결혼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출발선에서부터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는 젊은 이들. 입시도, 취업도 더 이상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성취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홍명한 / 대학생

“(서울대 입학생 중에) 유난히 수도권에서 온 비율이 높고 수도권 안에서도 특히 서울, 그 안에서도 강남, 양천, 노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후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느끼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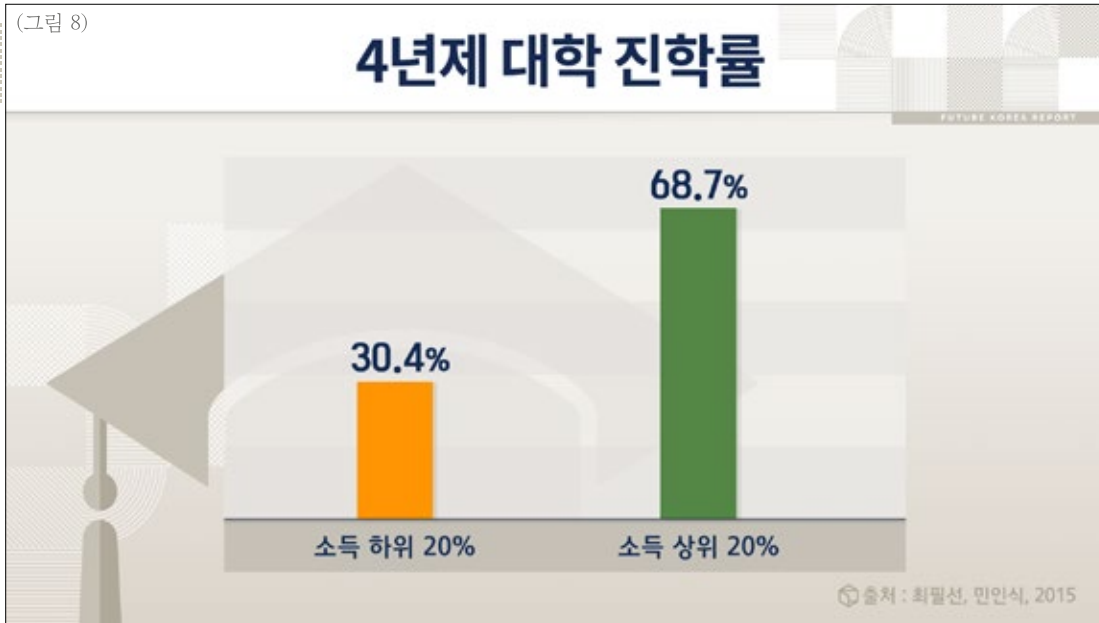
김진아 / 대학생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기회들이 잘 주어져야지 이런 게 맞물려서 대학도 연결되고 대학이 그렇게 연결되어야 취직이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제 스스로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마냥 눈높이를 낮출 수만도 없습니다.

박유상 / 대학생

“(작은 기업은) 진짜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아르바이트랑 똑같은 대우더라고요. 보수든 모든 대우가. 가정을 꾸릴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꾸릴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이 '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안 가냐'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분들도 자기 자식이 중소기업 간다고 하면 반대할 거예요. 아마.”

한만길 / 취업준비생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신분이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신분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그래서 모두가)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가는 것이고...”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사실상 실업 상태인 청년은 110만 명. 젊은이들에게 좀처럼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그 기회마저 불평등한 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사이 빠르게 진행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은 자녀 교육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소득 하위 20%가구의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30%인데 소득 상위 20%는 70%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림 8)

SBS 설문조사에서도 교육과 입시에서 소득이나 부에 상관없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구직과 경력 기회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5%로 더 적었습니다. (그림 9)

취재를 위해 만난 20~30대 젊은이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적다는 사실보다, 불평등의 굴레에 갇혀 희망이 없는 삶이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자녀계획도 자신들에게 사치라는 청년들의 말은,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2 PRESENTATION

양극화의 늪...다층적 불균형 -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앞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양극화 현실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기는 했지만 소득분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 정부, 공동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불평등은 주로 시장의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경쟁과 분업에 따라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을 위해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양극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먼저 양극화는 전체적인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고소득층 일수록 저축성향이 낮기 때문이지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잃게 됩니다. 의욕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또 꿈을 포기한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의 큰 발전을 이룰 대과학자나 기업인이 있었을지

도 모르지요. 그래서 양극화는 혁신 중심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양극화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38개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작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31위인데 우리가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수준을 보여 주는 '사회적 연대' 지표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국민간 관계가 단절되고 불신이 깊어져 우리 모두가 불행해 지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 석학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NTERVIEW

지난 9월 UC버클리에서 <승자독식 정치학>의 저자이자 미

국의 양극화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분석해낸 권위자로 유명한 폴 피어슨 정치학과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정애 / SBS 기자

“한국, 미국, 영국이 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글로벌 트렌드 아닌가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폴 피어슨 / UC버클리 정치학과 교수

“미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나의 관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 합니다. 또 미국의 눈에 띄는 특징은 불평등만 심화가 된 것이 아니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높게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승자독식 양극화>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미국에서 남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세계화로만, 혹은 경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 SBS 기자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왜 새삼 지금 부각 되고 있을까요?”

폴 피어슨 / UC버클리 정치학과 교수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저는 양극화 이슈를 사람들의 관심사로 올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미국에서의 관심은 6년 정도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경제적 침체와도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왜 그때 일어났는가와 비슷한 이치인데 미국에서 지난 40년간 억눌려 있던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이정애 / SBS 기자

“(성장의) 낙수 효과가 1970년대까지는 있었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없어졌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폴 피어슨 / UC버클리 정치학과 교수

“미국 사회에서 부자와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자원을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 부자나 힘 센 기업에게 몰아주었고, 그렇게 생긴 정치적인 권력으로, 부자나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정애 / SBS 기자

“미국 정부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한 것 중에 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림 11)

폴 피어슨 / UC버클리 정치학과 교수

“오바마 정부 초기 2년 동안 실질적인 정책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 개혁 법안이었지만 금융 시스템의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법안도 있었고 최저임금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겨우 몇 년 동안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 것 가운데 더 효과적이었던 정책의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림 12)

(1)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영업이익률 추이



(그림 13)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그림 14)

사업체 규모별 노조 조직현황



만 열려 있었습니다.”

이정애 / SBS 기자

“창문이 조금만 열려 있었다고 했는데요.
더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나요?”

폴 피어슨 / UC버클리 정치학과 교수

“(양극화 같은) 거대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 동원과 정치적 조직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별 유권자들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정애 / SBS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고, Gig 경제(필요에 따라 사람을 임시로 계약해 쓰는 형태의 경제)가 이뤄지면 노동자들은 더 파편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일하는 중산층은 누가 대변하게 될까요?”

폴 피어슨 / UC버클리 정치학과 교수

“IT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노동 방식은 노조 같은 조직을 결성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실리콘밸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기업들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숙련 지식 노동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있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 특정 시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아주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죠. 과거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던 현상입니다.”

이정애 / SBS 기자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양극화의 문제를 힘의 불균형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폴 피어슨 / UC버클리 정치학과 교수

“정말 힘의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덜 심각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트렌드에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정애 / SBS 기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기는 했지만 소득분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까요?

핵심 원인은 시장에서의 승자가 우월한 힘을 이용해 격차를 더 벌린다는 것입니다. 축구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그 팀 선수 한 명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업일수록 이익률이 높고, 기업에 비해 힘이 약한 노동에 대한 배분율은 낮아집니다. 또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의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정부와 공동체는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재분배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이지요.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 세 가지 힘의 불균형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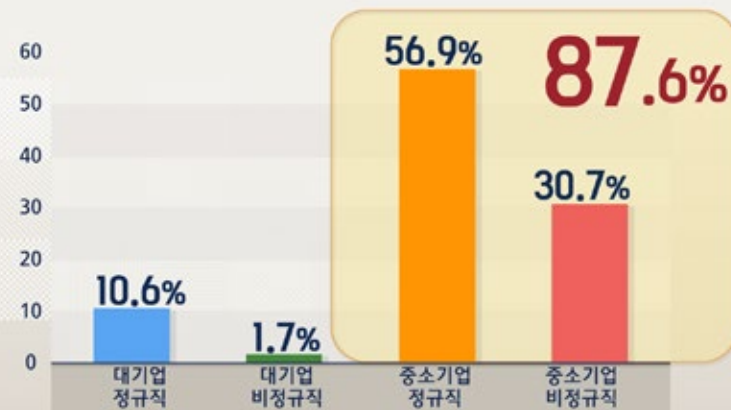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입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이 부상하고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늘 중소기업에 비해 높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림 12)

물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도 한 요인이지요. 대기업이 무리한 단가인하 요구로 중소기업을 압박하거나, 중소기업에 갈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메워 주

(그림 15)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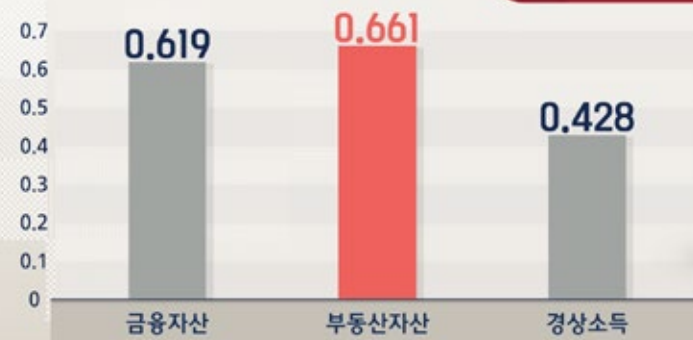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5.08

(그림 16)

(3) 자산가·무자산가 간 불균형

가계 불평등도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7)

30년 근속자 / 신입사원 월급(%)



출처: 노동연구원

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요구한다든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든지, 또는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더 폭 넓게 담합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3)

두 번째 힘의 불균형은 기업과 노동자간에 나타납니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비중은 점진적 하락 추세입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해외직접 투자를 늘린 것이 주 요인입니다. 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1년 이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배분이 감소하는 것은 유명한 피케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를 많이 쓰게 되니, 노동배분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림 14)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에겐 보호막이 있습니다. 바로 노조입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지나치게 강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노조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불투명한 회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비상장이 대부분이고 외부회계 감사도 받지 않아 대기업보다 회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63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중 우리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의 적절성이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대기업의 압박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동시에 노조의 보호 없이 불투명한 회계의 피해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노

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8%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이 근로소득 양극화의 핵심이지요. (그림 15)

이러한 기업과 노동자간 힘의 불균형은 건전한 노조활동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조가입율은 10%로서 OECD국가 평균인 28%에 크게 못 미칩니다. 유럽국가에선 노조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산업별 노조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못 받는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 힘의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 불균형보다 자산 불균형이 더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의 차이가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불균형은 2000년 초반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서 두드러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강남권의 25평 아파트 가격은 1988년 근로자 평균 월급의 198배였는데 이젠 470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불패라는 말까지 생겼지요. (그림 16)

이러한 자산의 양극화는 자영업의 양극화로도 연결됩니다.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업자는 잘 나가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양극화는 수요가 고집화 되며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기퇴직으로 생계형 자영업이 늘어난 탓도 크지요. 그러나 프랜차이즈나 임대사업자의 소위 갑질은 자영업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자산형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매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자산 관련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8)

힘의 불균형



전반적인 고용창출 부진도 양극화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촉진, 규제완화 등 지금까지 해 오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를 재검토 하는 것입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은 떨어 지지만 임금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람을 가급적 덜 쓰거나 비정규직으로 뽑으려 합니다. 정규직으로 뽑아도 임금이 너무 오르기 전에 내보내고 싶어하지요. 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작년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남성은 51.6세, 여성은 47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7)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양극화는 세 가지 힘의 불균형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자산가와 무자산가 간의 불균형이 그것입니다. 그 불균형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균형을 메우는 데에 정부와 시민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림18)



3 PRESENTATION

‘수저사회’...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앞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들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다른 분야의 불평등을 낳고 가족을 통해 불평등의 대물림을 가져오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반응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면 경제적 자본의 불평등 못지않게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도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녀의 교육 투자를 아낌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소득의 우위는 본인 및 자녀의 인적 자본 우위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비해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0배가 넘고, 사교육비는 13배가 넘습니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그 동안 계속 늘었습니다. 교육비 격차는 1996

년 4배에서 2006년 8.7배가 되었고, 지난 해 10배를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의 대학 교육비 부담이 큰데다 대학진학률마저 높은 한국에서 교육비 지출 격차는 자녀들의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5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들은 대학 진학률이 두 배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교육과 훈련만 아니라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을 낳습니다.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영양부족 비율이 하층에서는 14%인 반면 상층에서는 5%에 불과합니다. 2005년에 비해 하층은 변함이 없는 반면, 상층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비율은 40%이상, 좋은 비율은 27%인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비율은 60%, 나쁜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올해 SBS 미래한국리포트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돈이 급히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하층은 55% 상층은 9%로 6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외로울 때 말상대가 없는 비율도 하층은 28% 상층은 10%로 3배 차이 납니다. 소득 불평등이 인적 자본 격차를 낳을 뿐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즉 사회적 자본의 격차를 가져옵니다.

소득 불평등이 본인의 교육과 훈련, 건강과 사회적 관계 격차를 통해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면, 자녀 교육의 격차를 통해서도 세대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불평등의 대물림을 낳습니다. 불평등의 대물림은 불평등 그 자체 못지않게, 아니 더 크게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금수저-흙수저”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한 성취의 원인을 가족 배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 젊은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 비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말인데 과연 그런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림19)

이 그래프는 부모와 자녀간 직업지위 변화를 연령대 별로 보여줍니다. 60대 이상에 비해 4~50대의 상승이동이 늘어난 반면, 20~30대 젊은이들은 상승이동이 줄었습니다. 부모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자녀세대가 부모보다 이동기회가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계층 이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핀란드 사례를 보 시겠습니다.

FINLAND

성악가를 꿈꾸는 고3 안나는 학교가 끝나면 음악학원으로 향합니다. 성대를 풀고 한 시간 정도 성악 레슨을 받습니다. 선생님과 1대 1 개인교습을 마치면 음악 이론 수업까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안나 라베노야 / 고등학생

“선생님이 아주 전문적하시고 정확하게 잘 지도해 주십니다.”

공교육 위주로 학비를 받지 않는 핀란드에서는 이런 과외 학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자녀수가 많은 가정의 학생은 장학금을 받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 19)





타미 영 / 야르벤빠 음악학원 원장
“음악을 원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덕분에 안나의 아버지는 6개월 전 직장을 잃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은 없습니다.

벨리 라빠노야 / 안나 아버지
“실업 상태가 아이들 공부나 과외활동에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리카 라빠노야 / 안나 어머니
“다른 부분, 저를 위한 지출은 줄였습니다.”

100년 역사의 헬싱키 시벨리우스 음악학교. 유럽 전역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학교지만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고가의 악기까지 학생들에게 무료로 빌려 줍니다.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핀란드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일부 특권층이나 부유층만 다니는 값 비싼 사립학교는 아예 설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한누 란탈라 / 시벨리우스 음악학교 교장
“핀란드 전역에서 학생들이 입학합니다. 농민이나 공장 근로자 등 매우 다양한 계층의 자녀들이 들어옵니다.”

부모의 재력이나 가정형편 때문에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출세나 성공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핀란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성공의 열쇠라 생각하나요?”
(학생들) “아니요.”

에이카 티바리
/ 시벨리우스 음악학교 피아노 전공 학생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내 자신이 피아노를 치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가입니다. 돈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홍갑 / SBS 기자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

되고 가난한 계층의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이 배정됩니다.”

헬싱키 외곽의 이 학교는 이민자 자녀들이 절반이 넘고,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이 학교는 헬싱키 전체 학교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양극화 해소 목적의 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파시 살베르그 / EU집행위원회 교육위원장
“핀란드는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수교육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혁신 덕에 미국에서는 최저 소득구간의 가정 출신 중 40%가 그 구간에 다시 머물고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그 수치가 25%에 불과합니다. 또 핀란드 고등학생들은 읽기와 수학, 과학 분야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PISA 국제 순위에서 2000년 이래 줄곧 최정상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학생들의 자질 향상과 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20)

세대간 사회이동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은 의식조사에 잘 나타납니다. 미래한국리포트 연구팀이 의뢰한 조사 결과, 응답자 65%가 자녀의 상승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상승이동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인식의 계층간 격차는 36% 포인트나 됩니다. (그림21)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 동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간 상승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63%로 2006년에 비해 21% 포인트 늘었습니다. 계층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한국리포트 연구팀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95%가 우리 사회에서 세대간 계층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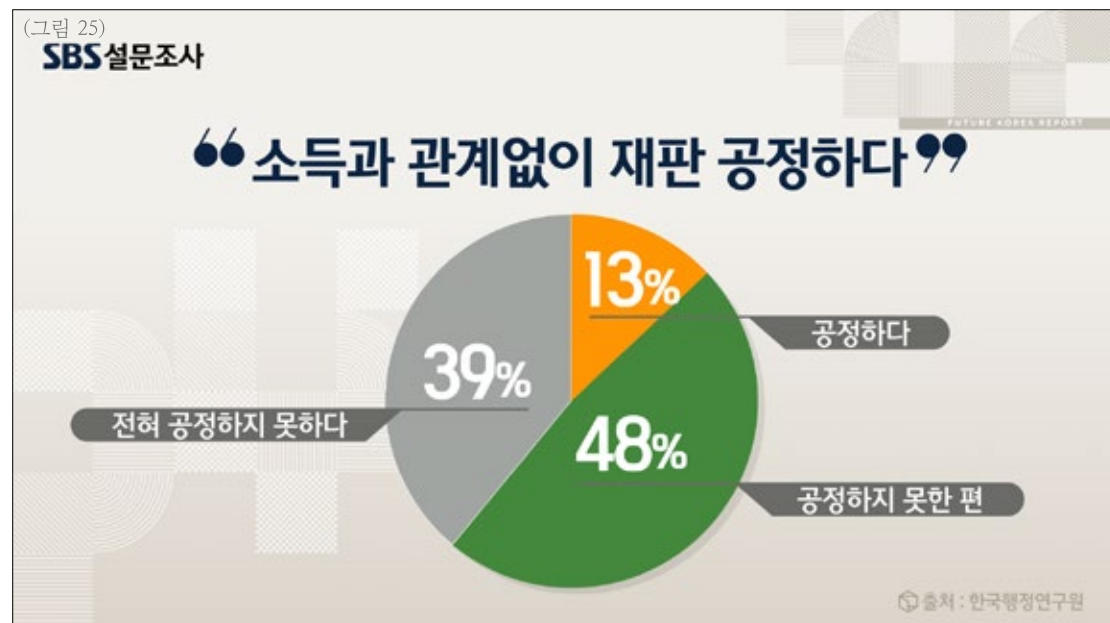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이미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계층구조는 중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일 것입니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나 전문가들의 제언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형태는 아래로 갈수록 하층이 늘어나는 피라미드형이 우세합니다. 미래한국리포트 연구팀이 의뢰한 조사 결과 한국의 불평등이 피라미드형이라는 응답은 61%, 그보다 더 악화된 대부분이 빈곤한 형태라는 응답도 15%나 됩니다. (그림22)

사회이동의 길이 막혔다는 인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미래한국리포트 연구팀이 의뢰한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계층간 인식 차이도 커서 하층의 90%, 중하층의 63%, 중상층의 40%가 본인의 소득이 능력에 비해 적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통합은 어렵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나 정부 신뢰가 낮습니다. 특히 불평등의 객관적 현실보다 주관적 인식이 더 크게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림23)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불평등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우리 사회는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요? 첫째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이동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이

동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차별이나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우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 형평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성취 열망과 능력을 높여야 계층 이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림24)

둘째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공공권력은 마땅히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차별로부터 약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리포트 연구진의 조사 결과 재판이 소득과 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합니다. 48%는 공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39%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림25)

불평등한 처지가 신분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승자에 대한 과도한 찬사와 패자에 대한 멸시를 자제해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고자 아니 뒤처지지 않고자 벌이는 무한경쟁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4

PRESENTATION

신사회 위험 극복과 21세기형 복지 -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앞에서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사회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칼 폴라니는 시장에서 교환, 공동체의 상부상조의 원리, 그리고 국가의 재분배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의 조화로운 관계가 결국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경제 원칙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봉상한제처럼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1차 분배가 실패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때 시장, 공동체, 국가 간의 조화로운 관계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가에 의한 2차 분배, 즉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며 결국 복지체제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럼 한국의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에는 경제성장이 최선의 복지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빈곤율은 1965년에 약 41%에서 1976년에는 14.6%로 감소하면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산적 계층과 정치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복지정책이 선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빠른 산업화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도 전면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환위기를 거치며 복지예산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적용범위도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도입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백여 년 동안 발전된 제도들이 한국의 경우 30여 년 만에,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복지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수준에 비하면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고, 정책의 재분배 효과도 낮습니다. 현재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수당과 연금 등 공적 이전을 받기 전 소득과 공적 이전 이후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복지체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구단위를 대상으로, 또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정규직 남성부터 먼저 적용 시키는 하향식 제도발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체제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에 잘 맞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와서는 신사회 위험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사회 위험이란 전통적인 가족구

조의 붕괴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저출산·고령화 현상, 기술 발전에 따른 제조업의 후퇴와 서비스업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말합니다. (그림 26)

먼저 여성의 학력수준과 취업률 변화, 전통적인 성 역할 변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 단신 가구,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독거 노인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해 출산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낮은 출산율 또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의 비율도 31.5퍼센트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한국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많

(그림 26)

新사회 위험 등장

전통적 가족구조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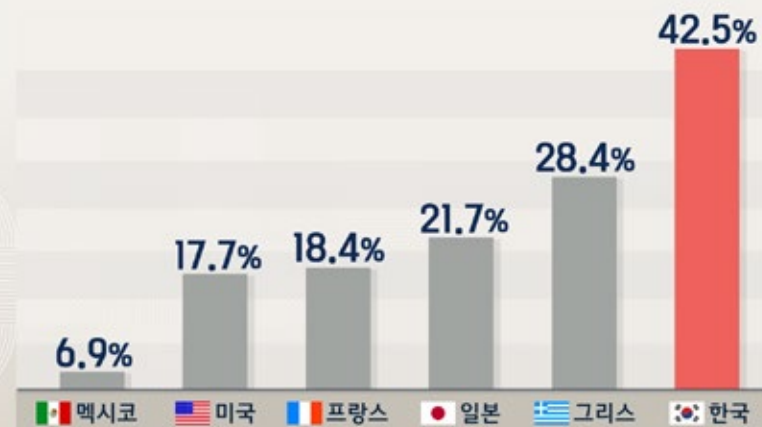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저출산·고령화 현상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 변화

(그림 27)

청년 니트족 중 고학력자 비중



출처: OECD

(그림 28)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증가



(그림 29)



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들의 고단한 삶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로 가장 높고 니트족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이 42.5%로 OECD 평균을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층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27)

여기에 일을 포기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니트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을 하는 플랫폼 기반 노동, 외주화된 회사에서 일하는 게임개발자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고용관계에 의해 포괄될 수 없는 청년층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28)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근의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은 고용이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제 근로, 특수형태 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경제하에서의 디지털 특수고용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 주문형 앱 노동자 디지털상에 흩어져서 조각 조각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하는 클라우드워크와 같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형태나 소득은 적용범위나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가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고용체계 개선과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복지를 실현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NETHERLANDS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페머만스씨는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사흘은 8시간씩, 나머지 이틀은 4시간씩만 일하는 파트타임 즉, 시간제 노동자입니다. 원래 전일제 노동자였는데 10년 전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자처해서 시간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림 29)

오토완 페퍼만스 / IT업체 개발팀장

“월급이 줄어도 괜찮고, 또 일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에서 시간제 노동으로 계약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반나절만 일하고 오후 한 시에 퇴근합니다. 절반만 근무하는 날 오후엔 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역시 시간제 노동자인 아내도 남편과 번갈아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샤샤(페퍼만스씨 아내) / 시간제 노동자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노동자는 전일제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마틴 반 콜크(페퍼만스씨 상사) / IT업체 부장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자 사이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고 해고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38%나 됩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75%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라 여크스 / 위트레흐트대 교수

“여성들은 일과 양육, 가사를 도맡아 하는데 큰 부담을 느낍니다. 시간제 노동은 그런 압박감을 줄여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동시장이 시간제 일자리 위주로 재편된 것은 1982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 즉, 노사간 대타협에서 비롯됐습니다. 1980년대초 네덜란드는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댔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습

(그림 30)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



(그림 31)

“복지는 기본권”



(그림 32) SBS 설문조사

증세해서 복지 확대해야



니다.

마틴 쾨너 / 암스테르담대 교수

“(노조측이) 임금동결 수준의 제안을 했고 (사용자측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화답했죠. 당시로써는 훌륭한 합의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시간제 노동자로 채워졌습니다.

폴 반 캄프 / 중소기업연맹 상임고문

“(기업 입장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경기변동에 대처하기 좋은 고용 방식입니다.”

정부는 세제 감면을 비롯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해고를 하지 않고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다는 재취업을 우선시 하도록 사회복지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크리스티나 구에론 / 실직자

“정부가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급여의 75%를 (일정 기간만) 받습니다.”

미셸 로버스 / 정부고용지원센터 전략기획팀장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항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실업보험) 제도가 가급적 빨리 일터로 돌아가 실업급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80년대초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20년도 안돼 1/3수준까지 떨어졌고 50%대를 맴돌던 고용률은 70%대로 뛰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룬 유연하고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힘을 합쳐 성장의 해법을 찾아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생태계를 위하여 한국의 재분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회보험이 다양한 고용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조건을 유연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험 급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과 돌봄,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하지 않고 좋은 질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삶을 위해 생애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보편의 원칙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가족형태가 다양화 하고 있는 사회변화에도 적합한 복지방향입니다. (그림30)

가족의 모습이 다양화되고 가구 규모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 또한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제와 같이 개인들을 전통적 개념의 가족에 계속해서 의존시키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보편적 권리로서 기본소득 도입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 장애수당 등 특정 하위 집단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본격적인 보편적 사회배당이 도입될 경우 사회보험도 공공부조 수준에서 더 나아가 본래의 목적인 소득비례 원칙에 더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림30)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확대된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체감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복지를 기대하지 않게 하거나 복지의 확대가 추가적인 세금인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낳았습니다. 미래한국리포트 연구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세를 통해서

(그림 33)



라도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약 7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복지가 강화된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32)

우리나라는 구사회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신사회 위험이 도래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복지 체제를 하루 빨리 갖추어 양극화도 해소하고 사회의 활력도 되찾는 것은 착한 성장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림33)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준) (2016년 9월 기준) (2016년 9월 기준) (2016년 12월, 증권업계 최초)
| 1969년 설립 | 5년 연속 신용등급 AA+ | 고객자산 209조 | 총자산 44조 | 소비자 중심경영 CCM 인증 |

48년간의 결과가 보여줍니다
누가 대한민국 금융투자의 대표인지.

 NH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총자산/고객자산(2016년 9월말 공시자료, 사업보고서) *5년 연속 신용등급 AA+(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준) *증권업계 최초 소비자 중심경영 CCM인증(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16-06507호 (2016-12-26~2017-12-25)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농협이 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결으로



전깃불만큼이나
반딧불이도 많은
청정한 세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흘려보내던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옳은미래.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자기야...
정말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맞아?”



아내가 저를 자주 의심합니다. 진짜 회사로 출근하는 거 맞냐고...
쇼핑몰도, 공연장도, 도로도, 학교도 모두 연결된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커넥티드카
그 차를 만들기 위해 이곳 저곳 연구하러 다닌 것뿐인데...
하필 이때, 같은 팀 김대리가 내일 야구장으로 출근하자는 문자를 보내네요
이래도 잡아떼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상과 연결된 새로운 커넥티드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뜻할 溫, 연결할 on, 다가온 온

미래로부터 ON



믿고 맡길 수 있는
만능 운전자

도로 위의 모든 사물과의 정보교환으로 안전한
자율 주행 환경을 만듭니다. 주변 차량의 목적지,
운행방향, 도로 상황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완벽
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생활 비서

자동차가 모든 사물과 정보들의 연결주체가
됩니다. 주행 정보는 물론, 운전자의 건강, 쇼핑
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물들을 컨트롤함으로써
자동차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똑똑한 정비사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정비사에게
연락해 문제를 진단합니다. 주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 했을 때도 즉각적인 진단과 해결이 가능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교통 정보를 분석하는
교통 전문가

차량 위치, 주변차량의 목적지,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 최적화 된 이동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에너지, 환경의 손실을 최소화
합니다



두근거림은
I am your Energy나

사람, 일, 사랑...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도 좋은 건,
낯설고 두려워도 참 좋은 건,
두근두근 여전히 가슴이 뛰는 것.
그게 바로, 산다는 재미.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KB가 디지털에게 전하고 싶은 첫번째 이야기

인공지능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세상
아빠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행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마음까지 담아주세요

365일 36.5°C
KB 디지털금융

당신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인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화생명 FP의 가장 큰 꿈은
당신의 삶을 아름답고 다채롭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파라오
월149,500 원 (39개월 약정)

ZERO G

태초부터 편안했던 각도를 찾아
무중력 프로그램으로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
ZERO-Gravity



BODYFRIEND

1600-2225 | www.bodyfriend.co.kr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KT&G가 세계로 뻗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서
세계 TOP5 글로벌 기업으로 -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낸
KT&G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상에 답하다 **KT&G**

제15차 미래한국리포트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 방정식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사회

FUTURE KOREA REPORT

2017

·

SBS

박수언 논설위원실장

노홍석 선임기자

이홍갑 기자

이정애 기자

신승이 기자

[주최]



[미디어파트너]



[협찬사]

